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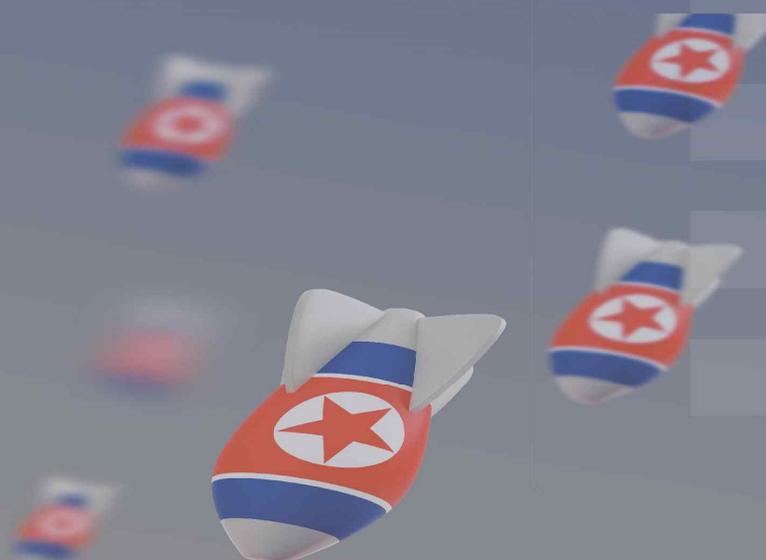
출구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 5.16(목) 오전10시

장소 | 제일빌딩 3층 (종각역8번출구 YMCA옆길)

주최 |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후원 | 바른사회TV



순서

■ 사회

- 박 인 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前 건국대 교수)

■ 주제발표

- 김 태 우 (前 통일연구원장)
- 박 상 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
- 서 유 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종합토론

- 조 성 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 폐회

■ 목 차 ■

■ 주제발표

- 북한 미사일 도발의 진실 9
- 김 태 우 (前 통일연구원장)
- 문재인의 대북 및 통일정책: 반(反) 자유, 반(反) 시장 15
- 박 상 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
- 김정은체제, 경제-사회주의 강조의 의미와 비핵화 문제 20
- 서 유 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종합토론

- 조 성 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27

■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 김 태 우 前 통일연구원장
- 박 상 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
- 서 유 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미사일 도발의 진실

김 태 우

前 통일연구원장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지루한 신경전을 벌이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탄급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지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5월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된 약 20기의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거리 70~240km를 기록했다.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 부근에서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은 각각 240km와 270km의 비행거리를 기록하고 동해에 낙하했다.

이후 남북한과 미국이 밝힌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북한은 외견상 ‘당당’했고, 한국은 ‘구차’해 보였으며 미국은 ‘인내’했다. 북한은 ‘정상적인 타격훈련’이라고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대북 식량지원 용의’를 표방했다. 한국 정부, 언론 그리고 군은 ‘발사체’ 표현을 사용하면서 애써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쾌하지만 신뢰 위배는 아니다”라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은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었다”였다.

이렇듯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온 것은 각국 정부가 처한 입장과 계산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각국 정부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간과해서 안 될 진실들을 짚고 가는 것이다. 즉, 정부나 합참의 표현과 무관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와 남북한 간 합의들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 북한이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한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신무기일 수 있다는 점, 한국 정부가 보여준 ‘나약하고 모호한’ 대응이 왜소화·고립화·주변부화되고 있는 한국 외교·안보의 현주소를 반영한다는 점 등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

3국 3색의 계산법

북한의 당당함은 사실상 ‘허풍’에 가까운 것으로서 초조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지난 일년동안 북한은 ‘수지맞는 장사’를 해왔다.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대가로 대북제재 체계를 흔들었고 한미 양국으로부터 ‘연합훈련 중단’과 ‘9·19 군사분야합의’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지난 2년 동안 10차례에 달하는 정상외교를 통해 ‘몸값’과 외교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강공, 굴복, 현상유지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로 내몰린 상태에 있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본격 재개하는 ‘강공’은 추가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전 세계와 맞서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 ‘굴종’이란 미국이 원하는 빅딜을 수용하고 모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of DPRK)’에 나서는 것인데, 그동안 국내적으로 선전해온 병진정책을 스스로 부인하고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실추시켜 정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국제제재로 인해 궁정경제와 군사경제는 물론 인민경제까지 궁지에 몰린 북한이 또 다시 주민들에게 ‘물과 공기만 마시면서 인내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현상유지’ 역시 쉬운 선택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현상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강공 프레스코’이자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노이즈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통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추가 제재를 수반하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자신들이 시도했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입각한 ‘단계적 비핵화,’ 즉 핵능력의 일부만을 포기하는 대신 제재 해제와 한미동맹 약화를 받아내는 ‘가짜 비핵화’를 수용하라고 외친 것이며, 한국을 향해서는 “남조선의 운명은 우리 손 안에 있으니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끼리’에 본격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급할 것이 없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다. “신뢰 위반은 아니다”와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대화의 창을 열어 두겠으니 협상테이블로 나오라는 뜻이다. 물론, 대북자세 자체가 부드러워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 화물선을 압류하고 대륙간탄도탄을 시험 발사하는 등 단호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즉,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효과를 확인했고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원칙도 확고히 한 상태에서 느긋한 심정으로 북한의 빅딜 수용 여부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나약하고 모호한’ 한국의 입장도 한국 정부의 입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민족 공조’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취해야 하는 이념적 목표이기도 하지만, 경제추락과 함께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태에서 2020년 총선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기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 제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도 제1조에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적대관계 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9·19 군사분야합의는 전체가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합의한 문건이다. 2006년 이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활동과 관련하여 무려 11개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는데, 한국 정부와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결의와 군사분야합의를 위배하는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구차한 일이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의미하는 위협

한국 정부와 국민이 간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은 북한이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의미하는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의 정도이다. 물론, 북한이 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미사일이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외형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면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은 이스칸데르가 유럽에서 불고있는 나토(NATO)-러시아 간 신냉전 바람 속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돌파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신무기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스칸데르(Iskander-M: SS-26 stone)는 러시아가 2004년에 개발하여 2006년에 실전배치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로서 사거리는 500km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수출용인 Iskander-E는 300km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스칸데르는 방어체계를 기만하기 위해 정상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을 벗어난 ‘변칙 궤적’으로 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러시아는 과거 바르샤와동맹국들이 NATO에 편입되는 나토의 동진(東進)을 불편하게 생각해왔고,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서진(西進) 및 세계 분쟁 개입을 경계해왔다. 2008년 미국이 체코와 폴란드에 MD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는 나토 접경지대에 이스칸데르를 배치하겠다고 경고했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MD 배치 계획을 취소하자 러시아도 이스칸데르 배치를 백지화했다. 이후 신냉전이 가열되면서 미국이 2012년에 스페인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터키에 X밴드 조기경보레이더를 설치하자 러시아는 2013년에 나토 접경지역에 이스칸데르를 배치하고 병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응수했고,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이어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자 미국도 독일에 지휘통제소를 가동하고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MD를 구축했다. 2016년 러시아는 이스칸데르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역외영토인 칼리닌

수하는 것을 두고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지만, 크게 보면 이런 접근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로 함축되는 수정주의적 안보·외교 노선을 걸어왔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희미한’ 대응도 결국 이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정주의 노선을 걷은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위상이 왜소화(trivialization)·고립화(isolation)·주변부화(marginalization)의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선택의 폭이 협소해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핀란드화(Finlandization)를 초래했으며, 미북 간 중재외교 또한 양측으로부터의 협공을 자초했다. 미국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는 중에 북한으로부터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어야 했다. 한국 정부의 과거회귀적 대일정책과 혐한(嫌韓)정서를 정치에 이용하는 아베 정부의 합작품이기도 한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외교기조 하에서 한미동맹이 예전 같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다.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맹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알 바가 아니라는 식의 이런 발언은 예전같으면 미 국무장관의 발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중에 한국의 안보역량 또한 ‘축소와 약화’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중국이라는 미래 위협이 부상하는 중에 한국이 군사적 역량을 줄여야 하는 하등의 이유도 없지만, 어쨌든 정부는 그 길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향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2.0’이 시행 중이고, 9·19 군사분야합의로 한국군의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대적 소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이 이완되는 중에 자체 안보역량을 축소하는 것에 더하여 대일관계마저 적대적으로 가져간다면, 솔직히 말해, 외교전략과 국방전략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외교적 파탄’과 ‘전략적 파탄’이 걱정된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맞이한 한국에게 있어 ‘모호하고 희미한’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인지도 모른다.(끝)

문재인이 대북 및 통일정책: 반(反) 자유, 반(反) 시장

박 상 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 / 前 통일교육원장

분단은 완결된 상황이 아니라 통일로 마감될 과도기다. 과도기 동안 치열한 이념전쟁이 치러진다. 다만 좌파는 이념전쟁의 투사들인데 반해, 우파는 이념전쟁 조차도 모른다. 문제는 이념전쟁의 승자가 통일을 결정한다는데 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대선이라는 이념전선에서 좌파가 승리했음을 의미하며 이후 대북 및 통일정책은 1국2체제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구촌에는 모두 5개 분단국이 있었다. 독일, 예멘, 베트남 3국은 통일이 되었고 한국 및 중국은 여전히 분단국이다. 분단국 중 자유민주통일로 분단을 마감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베트남은 공산적화통일, 예멘은 대화를 통한 합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지만 5년 만에 내전을 치르고 30년 동안 싸우고 있다. 중국은 공공연히 2030년 내 대만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분단을 마감하게 될까? 현재 진행 중인 이념전쟁의 승자가 결정할 것이다.
- 분단국의 운명 -

대통령 문재인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한 후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고 말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예의바르고 비전을 갖춘 지도자, 빛나는 조국을 위해 함께 걸어 가야할 동반자”라고 규정해 주었다. 현재 이런 대북관과 통일관을 가진 정치인들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 문재인 대북 통일정책: “신한반도 체제”(FAZ 09. 05. 2019)
 - “작은 통일 - 큰 통일”(통합-통일) 1국2체제, 낮은 단계 연방제
 - 특징
 -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비핵화 중재자 자임 등 과속 추진
 - 기승전北(북), 북적북적 정권
 - 현실적 실패
 - ‘작은 통일’(개성공단, 남북철도연결, 금강산관광 등) 만반의 준비, 북한의 핵 포기 불가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무산.
 - 국제사회, 문재인 평가
 - 김정은 수석대변인(블룸버그), 북한 에이전트(NYT), 북한의 말형(Sueddeutsche

Zeitung) 등 비판.

- 북한, “오지랴 중재자 버리고 제정신을 갖고 민족 이익의 당사자로 나서라”
일침

5.4/ 5.9일 탄도 미사일 발사

- 문재인 마이웨이

- 남북경협론자 김연철 통일장관 임명, 한미동맹 균열

문재인, “김연철 통일장관 내정은 美와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고 가겠다는 것”

- 대북 식량지원 의지

○ 이론적 실패

- 상이한 체제 간 연합이나 연방제는 불가능

예) EU

- 1국2체제 강행 時(시), 북한보다 50배 강한 남한 경제력은 북한의 괴물(정치력, 군사력, 외교력)에게 일방적 착취

- 스웨덴 경제학자 앤더스 에스룬드(Anders Aslund), "점진적 개혁은 어항에 생선수프를 넣고 수족관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예)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vs 구소련 독립국가

※ 문재인 FAZ 기고문에는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월요데모를 평화행진으로 묘사하며 이 평화행진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이라고 적었다.

김정은과 신한반도 체제를 열었다며 자화자찬하면서 동독 호네커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베를린 장벽을 해체한 라이프치히 월요데모를 치하한 것이다.

마치 탈원전을 내걸고 체코나 카자흐스탄에서 원전을 세일즈하는 것과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통일부, 독일통일 사례 삭제: 대북 및 통일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

○ ‘통합-통일’ 프레임은 과거 좌파 정부가 왜곡한 독일통일 경험에 기초

- 과도한 통일비용 및 동서독 갈등(동독 이등국민)

○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짜 프레임(통일비용 & 동독 이등국민)임이 드러남.

- 통일비용 프레임

- 20년 동안 2조 유로 부담 FACT,

하지만 통일편익 수십 배 + 인프라 구축 등 발전 동력 확보 + 분단극복 + 8천만 인구 + 유럽 리더국가 + 2015년 110만 난민 수용 FACT, TOO!

- 2060년까지 매년 26만 명 노동력 수입 (Focus, Spiegel 등 주요 언론 보도)

- 동독 이등국민 프레임

- ‘전라공화국’(한국당 제로)을 만든 나라가 거론할 자격있나?

출구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식 해석이요, 비약.
-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 요하임 가우크 전 대통령, 볼프강 티에르제 통일 8년 연방하원 의장,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지사 & 연방교통부장관 外(외): 동독 출신

※ 독일은 통일 후 비로소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 최강의 선진강국으로 부상. 동독은 서독의 우수한 기술과 경영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만났을 때 찬란한 보석으로 재탄생. (Der Spiegel, 27. 9. 2019)

※ 독일이 통일비용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 **가짜 프레임의 결과 : 좌파, 우파 변형 통일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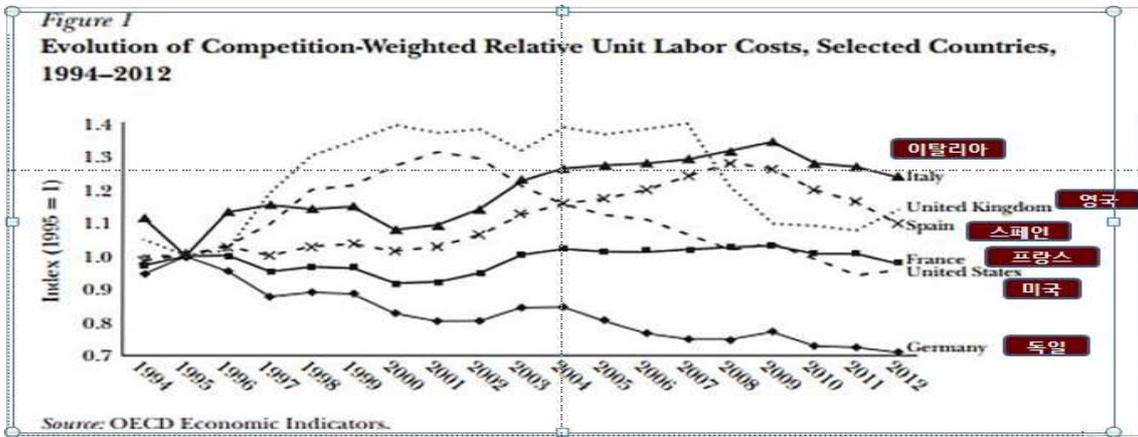
- 좌파의 대안 1국2체제: 김연철, 김병연(?) 外(외)
 - 공산적화통일의 길
 - 남한의 부가 북한으로 이동(조폭과 부자의 싸움, 결과는 조폭의 승리)
 - 김병연, “대북정책에 좌·우가 왜 필요한가”, 독일식 급진통일 불가
- 우파의 대안 1체제2국가
 - 북한 전체의 전라도화 우려
 - 북한 내 공산세력 차단 불가능

※ 참고: 박상봉, - "1체제2국가: 허구 프레임", lkp 2019. 4. 24.
 - “통일부 교재에서 독일통일 삭제”, lkp 2019. 5. 4.

□ **독일, 통일-통합 모델로 성공**

- 독일통일이 성공한 이유
 - 先(선) 자유민주주의, 後(후) 동독 재건
 -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물결 -> 라이프치히 월요데모
 - > 호네커 실권 -> 베를린 장벽 해체 -> 원탁회의
 - > 1990.3.18. 최초 자유선거 실시 -> 드메지어 정권 수립(반공산정권)
 - 공산정권, 자유선거로 청산
 - 호네커 몰락, 반공 변호사 드메지어 정권 탄생.

- 통일 후 독일경제
 - 임금경쟁력 제고



○ 주요국 실업률 비교



○ 독일, 2060년까지 매년 해외노동력 26만 명 수입해야
 - 260.000 Menschen pro Jahr/ Deutscher Arbeitsmarkt braucht Zuwanderung aus Nicht-EU, FOCUS, 12. 2. 2019. “독일 매년 26만 노동력, EU 비회원국에서 수입해야”

○ 통일반대 주변국, “동독은 다이아몬드 원석, 서독 손길 만나면 찬란하게 빛날 것”

- "sie sorgen sich auch um die Wirtschaftskraft eines geeinten Deutschlands, weil sie wie viele Beobachter glauben, die ostdeutsche Wirtschaft sei ein Rohdiamant, der bei westlicher Pflege bald hell strahlen werde."

“주변국들은 통일된 독일의 경제력에 우려가 깊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동독 경제는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서독의 손길을 받으면 찬란히 빛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in, "Allein gegen Alle, Der Spiegel, 27. 9. 2010

○ 동서독 1인당 GDP 발전 추이



※ 문재인 정권은 脫(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패가 예정된 대북정책도 밀어붙이고 있다.

[발제] (2019.5.16)

김정은체제, 경제-사회주의 강조의 의미와
비핵화 문제

서 유 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1

< 2017년 '핵무력 완성' 선포와 한미북 정상회담 >

-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새벽 2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주장 --- 이후 한반도 정세 급변
- --- 2017년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미중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 중국은 쑹 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을 통해 해결책 모색했으나 쑹 특사 김정은 면담 불발
- 북한의 태도는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 참여에 전향적 의사를 내비침
- 2월과 3월 남북 특사 교환(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특사 파견) -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6월 미북 정상회담 취소후 이틀 뒤 남북 2차 정상회담 개최-6월12일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 2018년 9월 18일 남북 3차 정상회담(평양)

2

< 2019년 상황의 전개 >

- 2019년 북한 신년사의 키워드 – ‘사회주의’, ‘자력갱생형 경제’
 - ‘경제’ 38회, ‘사회주의’ 32회, ‘핵무기’ ‘비핵화’ 등은 각 1회
 - ‘김일성·김정일’은 생략 --- 김정은체제 안착
 -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토대 강조
 - 군수공업 분야의 인민경제분야 지원
 - ‘원자력 발전능력’, ‘군수산업의 민수화’ 관련 언급
 - 군수공업의 ‘세계 선진화 수준’으로의 발전 강조
-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2월 27일)
 - 회담 결렬으로 미북간 거래의 조건이 달랐음이 확인됨
 - 이후 미북간의 신경전에서도 트럼프-김정은간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

3

-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등 진행
 - 4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안건을 미리 결론내리고 최고인민회의라는 대의기구를 통해 결정사항을 발표하는 형식-----
- 특징
 - 김정은체제 2기 출범. 대규모 인사이동, 특히 세대교체가 단행
 -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이 정리되어 발표
 - ‘자력갱생’을 현재의 경제제재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제시
 - 양형섭 개회사, 2018년 이후 ‘금칙어’였던 ‘국가핵무력’ 재언급

4

<김정은 시정연설 주요내용>

-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 김정일시기에 사장되었던 '사회주의완전승리' 용어 부활(노동당 규약 서문, 노동당의 당면목적, 김정은체제가 사회주의시스템의 보수적, 원론적 관점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
-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을 미국의 책임으로 전가 ---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 남북관계와 관련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5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

- 북한이 원하는 '경제' 그리고 '사회주의강국'을 어떤 형태를 의미하나?
- 노동당 규약에 존재하는 노동당의 '당면 목적' '중국적 목적'
- 김일성시기의 당면목적 - 사회주의완전승리
- 김정일시기의 당면목적 - 사회주의 강성대국(2010년)
- 김정은시기의 당면목적 - 사회주의 강국건설(2016년)
- 김정은 시정연설로 김일성 시기의 사회주의완전승리=사회주의 강국 확인

6

• 공산주의발전 단계론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회주의단계로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공산주의 낮은 단계)와 '사회주의 종국적 승리단계'(공산주의 높은 단계)로 구분

• 즉,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아직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즉 수령독재의 필요성 강조

• 북한의 '과도기'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징표는 '경제력 향상'문제로 귀결.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지고 전 사회가 노동계급화 된 사회로서 사회의 물질 토대와 생산력의 수준이 발달한 자본주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회를 말함

• 김정일시기에 '사회주의 완전승리'가 '계혁'의 문제로 전락하면서 '강성대국론' 등장

• 강성대국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2012년을 목표로 설정)

• 2011년부터 '사회주의 강성국가' 등장 이후 2016년 사회주의 강국

7

• 우리는 현재 북한 노동당이 당면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김정은은 군사강국건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 유념해야 할 점은 김정은체제에서 주창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국'건설 레토릭안에 '강성대국론' DNA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면 '핵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외부적 이미지와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의 보수화를 지향하고 있음.

• 이것이 향후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문제와 관련,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임.

8

<전망>

- 한국 정부에게는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요구
- 미국 정부에는 제재 해제 요구
-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수-민수 경제의 통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통제 등, 비상경제시스템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 김정은 체제는 정치사상-군사-경제의 세가지 기둥 가운데 마지막 '경제'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딜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올해 말까지 대남용 첨단무기 실험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9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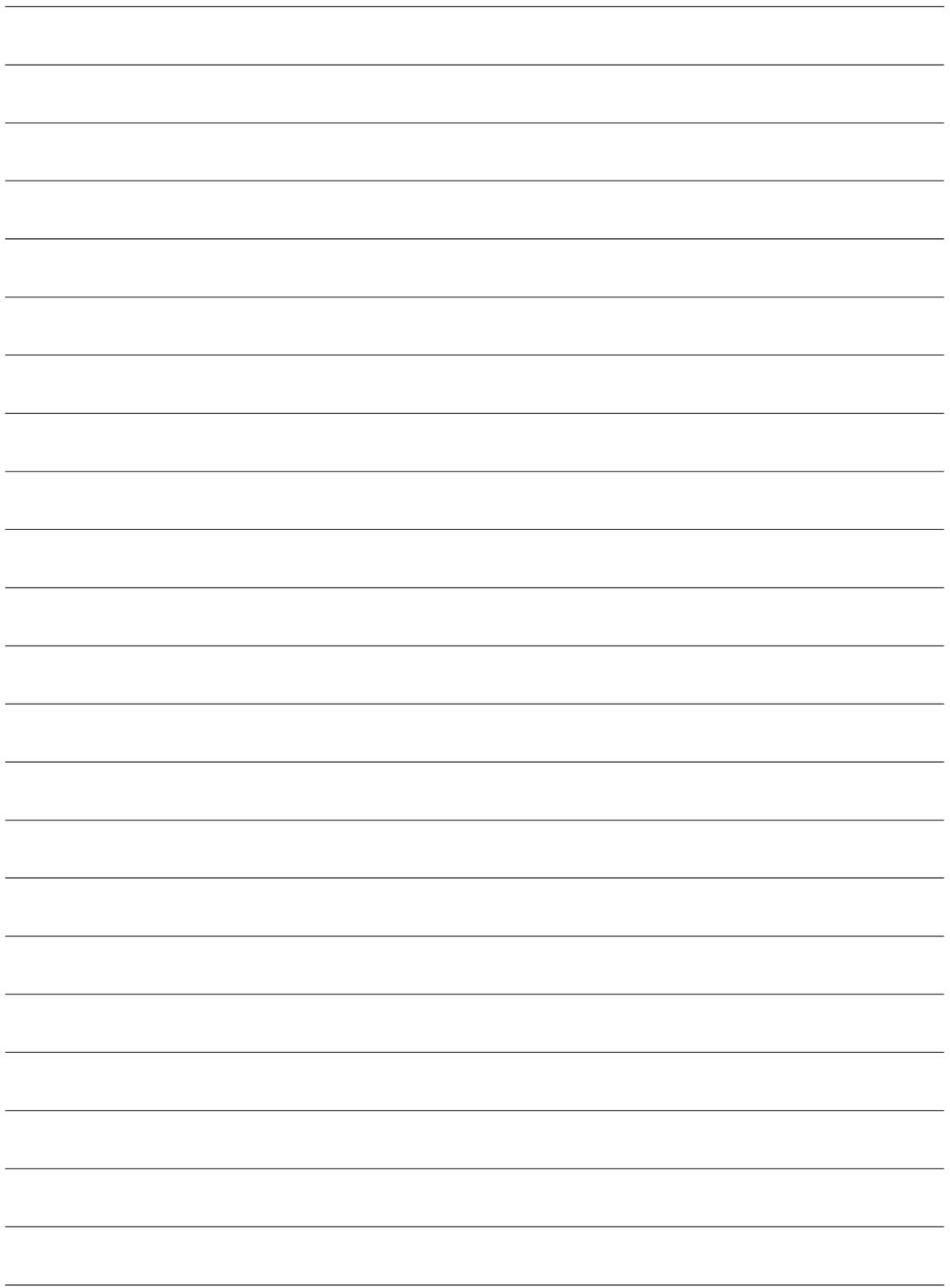
■ 정책토론회

종합토론

■ 조 성 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출구없는 대북정책

조 성 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163 B1(흑석동)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